



**풍년기원 고싸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인 고싸움놀이 축제가 14일 오후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열렸다. 높고 파란 가을하늘 아래 동부와 서부로 나뉜 마을 주민들이 상대의 고를 땅바닥으로 내려 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5개월 극한대립 대한민국 '정치 시계' 멈췄다

세월호법 싸고 국회 울스톱  
광주 방문 정의화 의장  
"의사일정 직권상정할 수도"

오는 16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후속 대책마저 '울스톱'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여야는 지난 5월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활동 시한을 넘겼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했지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서 허무하게 마감 시한을 맞았다.

핵심 법안인 세월호특별법도 진상조사 시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선출 방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헛바퀴만 돌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진통을 겪으며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관련 법안들도 모두 멈춰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

언법(범죄은닉재판수권화법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관련 대책 법안이 '낮잠'만 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정당화 요구가 빚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가 타개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7·30 재보선' 이후 야당의 리더십 붕괴와 여당의 정치력 부재까지 겹치면서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주 두 차례 단독 회동을 했으나 예상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같은 교착 정국 속에서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강행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 정국 파행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재정 확충 효과 없는 지방세 인상

### 뉴스 초점

정부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나 재정확충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3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나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급증하는 자치단체의 복지 부담 등을 주민에게 떠넘긴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인 전남도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그동안 1만원

### ■광주시·전남도 분석

담배·주민·자동차세 올려도  
시·군 10억원 증액 그쳐  
복지비는 1년새 수천억 증가  
국세, 지방세 전환해야 효과

이내에서 결정됐던 주민세를 1만원 이상~2만원 이내로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민세가 각각 4500원과 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부터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목포시만 유일하게 지난해 주민세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18면

### 한국, 말레이 3-0 완파

아시아게임 축구 산뜻한 출발 ▶21면

고 있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증액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방세 인상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 방지된 일부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말하는 지방재정의 대규모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2013년 대비 27억원, 주민세는 7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6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으로는 복지비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시의 복지예산은 지난 2010년 8312억원에서 4년만에 1조2340억원으로 무려 4028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남도 역시 이번 정부 조치가 그동안 요구해온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재정난 지자체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 등을 외면했다는 입장이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모두 시·군세로, 22개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도입한 가운데 추가로 거둬들일 규모도 개별 지자체당 최대 10억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올해 전남도 전체 예산은 5조8031억원으로 2150억원이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923억원이 증가한 1조9172억원이 책정됐다.

전남도 신재춘 세정 담당은 "지방세제를 개편하는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갑자기 발표된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클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플트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교육책임이라는 진단도 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확대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는 등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린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연내 졸업할까



### 광주·곡성공장 등

### 오늘부터 채권단 실사 돌입

금호타이어가 15일부터 올해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졸업을 위한 채권단 실사를 받는다. 채권단은 우선 서류 검토가 끝나면 국내공장 및 해외공장 방문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지속성장 가능성과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협의회는 15일부터 두 달 동안 금호타이어의 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사를 시작한다. 채권단은 이미 금호타이어 측에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1월 말 결과제출을 위해 안전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는 회계법인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살펴본 뒤 금호타이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본사 자료 검토가 끝나면 국내공장 및 해외공장 방문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경영실적 개선은 물론, 지속성장 가능성과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집중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원단체협상을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노조는 흑자 모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 실사 기간 동안 투쟁을 벌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스포츠 4대악 신고로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지켜주세요

### 정정당당 스포츠, 행복한 대한민국

- 승부조작, 편파판정 없는 공정한 결과
- 입시비리 없는 투명한 경쟁
- 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한 환경
- 조직사유화 없는 열린 문화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스포츠 4대악 신고전화 **1899-7675**

신고대상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및 공정성 침해사례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www.mcst.go.kr / 전자메일 : 18997675@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